

김정일 체제와 南北관계 전망

北韓研究팀*

김일성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북한 내부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김정일 체제가 순로롭게 구축되어 가고 있는 듯하나, 이 체제가 어떠한 성격을 띠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혹자는 김정일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혹자는 곧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데에는 물론 북한에 대한 자료의 절대적 부족과 자료의 비신뢰성도 작용하겠지만, 보다 커다란 이유는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료의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의 주관적 희망 사항이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에 대한 객관적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능한 한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김정일 개인에서부터 국제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김정일 체제의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내려보고 그에 따른 남북 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예상해 보고자 한다.

김정일 체제의 등장

승계 체제의 구축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 작업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1973년 黨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조직·선전 담당비서로 선출되었으며, 다음해인 1974년 2월에 개최된 바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이병두 선임연구원(정치학 박사), 김옥 책임연구원(정치학 박사), 이철순 책임연구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에 대한 이러한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위원회에서의 추대는 비공개적인 것이었으며, 항일빨치산 출신들이인 혁명 1세대가 주동이 되어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黨적 지위를 통해서 김정일은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해 나갔으며, 3대혁명소조라는 친위대를 조직하여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추진하고 자기의 권력기반을 구축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경쟁운동으로서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전개했으며, ‘속도전’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전개했다.

1980년 10월에 개최된 바 있는 노동당 6차 대회에서는 김정일이 정치위원, 당비서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 등으로 선출되어 김정일이 조선노동당을 실질적으로 장악 운영하며, 수령의 후계자라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6차 당대회부터는 김정일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부상은 물론 그의 활동영역이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는 문제와 함께 김정일에 의한 권력이양 작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김정일은 당과 국가, 군의 수위에서 후계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 5월에 개최된 바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1차회의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함께 김정일이 후계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1991년 12월에는 노동당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9기 5차회의에서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은 권력구조상의 지위가 보다 격상된 것이며, 김일성 권력의 일부를 부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김정일의 지위 격상과 함께 사상이론가로서의 이미지 부상에도 주력했다. 1991년 5월 5일에는 당 책임간부들과의 담화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담화를 발표하여 북한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식화했는데 1992년에도 두 가지의 지도이론을 제시했다. 1992년 1월 3일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 앞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

훈과 우리당의 총노선”이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했다. 1992년 10월 10일 당창건 47주년에 즈음해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1993년 3월 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사회주의에 대한 왜방은 허용될 수 없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러한 몇 가지 지도이론들은 종래에는 김일성만이 제시할 수가 있었는데 그를 대신해서 김정일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북한사회주의 건설을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지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20년 이상 추진되어 왔던 권력승계 작업 덕분에,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기 또는 과도체제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시대의 수령으로서의 모든 권력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김일성 死後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 과정

김정일이 20년 전부터 이미 후계 체제의 구축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체제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김일성이 지난 7월 8일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의 북한의 동향을 살펴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직후 발표된 장의위원회 서열에 첫번째로 이름이 올라 있다. 통상적으로 공산국가에서는 장의위원회 서열이 바로 권력의 서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7월 11일 공개한 김일성의 시신에 조문하는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의 중심에 김정일이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당·군·정 세 분야에서 권력의 핵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방송에서 김정일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그가 자신의 권력을 얼마나 공고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북한 방송은 12일 김정일을 당·정·군의 ‘최고 수위’로 지칭하였고, 13일자 방송에서는 ‘위대한 수령,’ ‘또 한 분의 수령’으로 호칭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김정일 찬양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7월 20일 김일성 추도대회에서 김영남 외교부장은 김일성의 뜻에 따라 전당·전민·전군에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黨중앙의 영도체제를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평양방송도 20일자 방송에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黨중앙의 영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현재의 전망으로는 곧 열리게 될 黨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이 갖고 있었던 黨총비서와 국가주석직을 승계함으로써 승계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체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 분석

김정일의 경제관

김정일 체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고려해야 할 첫번째 요인은 바로 김정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이다.¹⁾ 그의 경제관은 사상·정치 우선 관점에서 경제자체의 논리를 인정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전환중에 있으며, 현재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북한 경제에 개입한 것은 이론문제부터였다. 그는 60년대 후반 당시 북한 경제의 통설이었던 균형발전론을 비판하면서 속도를 강조했다. 사회주의가 일정한 발전단계에 오르고 규모가 커지면 발전속도가 떨어진다는 균형론에 대해서 김정일은 주체적 요인을 강조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가져올 빠른 발전을 역설했다.

이러한 김정일의 사상론적 경제방식은 1974년 10월부터 벌어진 ‘70일 전투’를 통해 처음으로 경제에 적용됐다. 이때 그는 빠른 발전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선동대를 조직하여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발동시키고, 주어진 시간 안에 전격적으로 일을 해내는 ‘속도전’을 경제에 도입했다. 그러나 속도전적 경제운용 방식은 결국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창의력에 바탕을 둔 기술혁신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80년대 이후 경공업 분야가 두드러지게 뒤떨어지고 기술발전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사상동원을 통한 경제방식이 한계에 부딪친 것이다.

바로 이때 김정일의 경제인식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속도전적 경제방식에 실용주의적 측면들을 보완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80년대 속도창조 운동’을 내세웠으나, 다른 한편으로 부문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경공업분야에 집중적

1)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김정일의 성격이 있다. 하지만 그의 성격에 대한 자료는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것들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자력갱생의 깃발 아래서 비판적으로 보던 중국의 개방정책을 부분적으로 원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경제통인 강성산을 정무원 총리로 기용하면서 1984년 9월 외국기업과의 합작관련 조항을 규정해 놓은 「합영법」을 제정했다. 나아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93년 10월 「합작법」을 제정하고, 1994년 1월에는 외국인 투자가 유리하도록 「합영법」을 개정하는 한편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외국기업과의 합작과 자본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런 김정일의 실용주의적 경제관 선회 조짐은 최근 그가 발표한 논문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는 1991년 10월 전국과학자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자공학·기계공학 등 과학 전분야에서의 빠른 발전을 강조하면서 과학자·기술자들이 ‘충실성과 혁명적 열정’만 가지고는 안되며,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적극 도입을 촉구하고, 최신 과학기술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의 폭넓은 합영·합작을 강조했다. 이는 김정일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개방정책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김정일의 경제관점은 경제 저발전에서 직면하면서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김일성 사망과 관계없이 개방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케 해준다.

김정일을 둘러싼 북한의 권력 엘리트

김정일 체제의 성격을 좌우하는 두번째 요인은 김정일을 둘러싼 엘리트들의 성격이다. 김정일을 보좌하고 있는 엘리트들은 김일성 시대에 비해서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첫번째 특징은 북한혁명의 新舊세대가 결합돼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혁명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부상한 신세대와 혁명 1세대가 공존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두번째 특징은 혁명 1세대가 아닌 신세대 지도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출신성분과 무관한 실무형 지도자라는 점이다. 과거 혁명 1세대가 거의 정치·군사 부문에 일률적으로 特長이 있었던 점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구축되고 있는 김정일 인맥에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과학, 사상,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인물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엘리트 구성의 변화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시기가 북한사회가 체제안정기로 돌입하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즉 혁명초기에는 사회안정과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정치·군사 방면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핵심이

구성됐으나, 체제안정기에 접어들어서는 체제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을 지닌 김정일 주변의 엘리트들은 출신 배경에 따라 크게 4 부류로 나뉜다. 먼저 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혁명 1세대가 있다. 현재 항일혁명 1세대로 현직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인민군총참모장 최광, 국가부주석 박성철, 국가검열위원장 전문섭, 사회안전부장 백학림, 국방위원 김철만, 당군사위원 이두익, 국방위원 겸 당군사위원 이을설 등이 있다.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의 경우, 유격대 출신은 아니나 성격상 혁명 1세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의 비중은 자연수명의 한계로 인하여 점점 줄고 있으나 현재 김정일 후계체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일을 보좌하는 두번째 그룹은 ‘항일혁명 2세대’들이다. 오늘날 김정일을 보좌하고 있는 북한의 핵심 지도부는 대부분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김정일과 혈연적 연대의식이 강한 이들은 당·정·군에서 북한권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서방에 잘 알려진 혁명2세대로는 정무원 총리 강성산을 비롯해서 당정치국의 김국태, 당 군사위원회회의 오용방, 이봉원, 당 부장 오극렬, 김경희, 장성택, 중앙인민위원회회의 최문선, 임형구, 이길송, 백범수, 부총리 김환,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위원장 최용해, 군단장 강창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장성택은 김정일의 동생인 김경희의 남편으로서 김정일시대의 제2인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당 중앙위원으로서 중앙당의 3대혁명소조부장, 근로단체부장, 청년사업부장 등을 맡고 있으며 직책이나 서열에 상관없이 김정일의 매제라는 막강한 배경을 엮고 급부상한 인물이다. 그는 ‘돌아다니는 김정일’이라고도 불리는데, 김정일이 안에서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정책을 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장성택이기 때문이다. 그는 김정일과 콧비가 되어 지난 1989년의 평양축전을 치뤘던 바 있다.

김정일을 보좌하는 세번째 그룹은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형 지도자들이다. 항일혁명 2세대의 두드러진 진출과 함께 80년대부터는 사회 각 분야에 항일혁명의 혈통적 관련은 없으나 탁월한 전문역량을 가진 실무형의 지도자들이 김정일에 의해 대거 등용되기 시작했다. 이들 실무형 지도자들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으로 정치구조가 안

정기에 접어드는 80년대 이후 사회발전 방향을 정치지향으로부터 경제논리도 중시하는 균형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두드러지게 진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대두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정에서 경제발전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한 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김정일의 실용주의적인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하는 이들의 등용은 90년대 들어 와서 가속화돼 왔다.

현재 노동당 안에서는 중앙당의 인사 및 당면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실질적 당내 권력기구인 비서국이 이미 실무형 지도자들로 채워져 있다. 지금까지 김정일의 주관 아래 북한사회 지도의 실질적인 참모역할을 해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김정일을 비롯해 계응태(공안), 전병호(군수), 한성룡(경제), 최태복(교육), 김중린(근로단체), 서관희(농업), 황장엽(국제), 김기남(선전), 김용순(대남)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역량을 자랑하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 비서들의 포진은 비서국 구성원의 대부분이 항일혁명원로들로 채워졌던 1970년대와 비교해 볼 때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당의 주요 인물들 중 공안사법담당 비서인 계응태는 북한의 정보 사찰기관을 총괄하는 실력자다. 당노선에 대한 당·정·군·인민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실천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공업과 기계, 금속 분야를 각각 맡고 있는 전병호와 한성룡 역시 김정일시대 이후에 등용된 당비서로 김정일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해오고 있는 측근 테크노크라트들이다.

국가기관에서 실무형 지도자들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곳은 경제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정무원이다. 실무형 지도자들의 온상지인 정무원은 북한헌법상 행정적 집행 기관으로, 과거의 내각에 비해 그 지위와 기능이 매우 약화된 채 운용돼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의 최대 현안이 경제난관의 극복으로 설정되면서 정무원의 위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것은 최근 정무원 총리가 북한 권력구조 내에서 김정일, 오진우에 이어 서열 3위에 위치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서 김정일이 실무형 지도자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무형 지도자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무원은 강성산 총리 아래 김영남(외교부장, 당 정치국원), 최영림(금속공업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강희원(당 정치국 후보위원), 홍성남(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복신(경공업 위원장), 김윤혁 김환 김창주 장철(문화예술부장), 공진태(인민봉사위원장) 부총리들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정치국원으로서 서열 3위인 강성산 정무원 총리는 김일성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전임 이근모, 연형묵 총리 등과 함께 북한경제를 진두지휘해 온 대표적인 경제 테크노크라트다. 최영림과 김환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정무원 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김정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부총리 겸 금속공업부장인 최영림은 주식공참사실장(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일성 일가의 家臣格인 인물이다. 그는 김정일 후계체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 위기가 닥치는 비상시기에 전면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환 역시 김정일시대의 개혁세력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연형묵과 김달현 등 일선에서 물러난 인사들의 거취도 주목할 만하다. 남북고위급 회담 등으로 남쪽에도 잘 알려진 이들은 비록 중앙부처의 고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경제테크노크라트로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언젠가는 다시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 한국 전쟁 당시의 유자녀 출신 그룹들도 김정일 후계체제의 막강한 기반이다. 아직 이들의 연령이 50대 전후이기 때문에 대부분 권력의 핵심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김정일체제를 저변에서 떠받치는 가장 광범하고 실질적인 힘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김정일은 북한사회의 다방면에 걸친 엘리트들을 거느리고 있다. 특히 실무형 지도자들을 많이 확보한 것은 그가 앞으로 제한적이거나 개방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게 한다. 또한 오진우와 같은 항일혁명1세대로 대표되는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가 단시일 내에 군부쿠데타와 같은 정변에 의해 실각하지 않고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것도 예견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 보수파 1세대들의 존재는 급격한 개방정책에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

김정일 체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세번째 요인은 바로 북한 사회의 성격이다. 북한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회 중의 하나로, 이러한 특수성에 대

바로 이러한 북한 사회의 특수성은 汎세계적인 사회주의의 퇴조와 자유화, 개방화의 물결에도 북한이 아직도 과거의 폐쇄적 사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원인이었다. 이는 또한 김일성이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등장한 김정일 체제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해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북한의 경제난

김정일 체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네번째 요인은 북한의 경제난이다. 북한 경제는 최근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의 1人當 GNP는 1990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대외 무역도 감소하고 있다 (<표 1> 참조). 외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곡물 생산량, 강철 생산량, 원유 도입량 등도 줄어들고 있어 북한의 경제는 한 마디로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난의 극복은 김정일 체제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할 것이다. 경제가 점점 파탄에 빠지고 주민들이 배를 굶주리게 된다면, 아무리 생존력이 강한 북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내부 분열에 의한 붕괴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따라서 경제 회생을 통한 주민들의 일차적 욕구 해결이야말로 새로 등장한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경제를 회생시킬 것인가? 과거 그들이 의존했던 이념과 희생 정신에의 호소를 통한 인민동원식 경제 개발의 한계성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 확대만이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에는 북한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 필요성이 근본적으로 폐쇄 성향을 가진 북한 사회에 막대한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며, 김정일 체제도 이러한 압력을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2) 물론 여기에서의 생존력은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수동적 거부에 의한 것으로서, 변화가 가하는 압력의 정도가 일정 수준 (threshold)을 넘어서면 사회는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다.

<표 1> 남북한 경제의 1人當 GNP와 경제성장률

		남한	북한
1人當 GNP (달러)	1990	5,883	1,064
	1991	6,757	1,038
	1992	7,007	943
	1993	7,466	904
경제성장률 (%)	1990	9.6	-3.7
	1991	9.1	-6.2
	1992	5.0	-7.6
	1993	5.6	-4.3

자료: 「시사저널」 244호 (1994. 6. 30), pp. 20~21.

국제 환경의 변화

김정일 체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인은 바로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의 변화이다. 국제 환경의 변화는 북한 사회에 불어닥치는 가장 커다란 변화의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세계 체제의 차원에서 볼 때, 1990년대 들어 북한에게 불어닥친 커다란 변화는 냉전 체제의 와해이다. 소련의 붕괴, 그에 따른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유화는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 왔던 동서간의 냉전 체제를 와해시켰다. 이러한 세계 체제적 변화는 사회주의의 퇴조라는 면에서 북한에게 심리적 고립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교역 파트너의 상실이라는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북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보다 좁게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세력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美-日-南韓 對 蘇-中-北韓이라는 동북아의 세력 균형은 무너지고, 게다가 남한은 소련과 중국 양쪽 모두와의 수교에 성공하였다. 반면,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북한은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립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세력 판도는 남쪽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이러한 국제 환경하에서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심한 고립감과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안정된 냉전 체제, 그리고 그에 따른 동북아에서의 세력 균형 하에서는 북한은 폐쇄성을 유지하며 현상태에 안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화된 국제 환경은 북한에게 매우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것이며, 북한으로서는 이의 타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면에서, 김정일 체제가 과거의 자주·자립을 어느 정도 포기하

고 미국, 일본과의 시급한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것은 비단 앞에서 언급했던 경제난 해결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하다.

한편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개방 압력도 상당하다. 미국과 일본 등은 핵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의 돌출적인 군사행동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또 경제적 투자 증진을 위해서도, 북한의 개방은 이들에게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소련의 붕괴후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중국으로서도 더 이상 북한을 무조건 지지할 수 없는 처지이며, 북한의 개방을 바라고 있다. 북한의 개방은 시대적 조류일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 전체가 바라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성격과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短期 전망 (1년 이내)

먼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김정일 체제는 안정을 유지하며 제한된 개방이라는 과거의 정책 방향을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체제의 단기적 안정성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김정일이 지난 20년 동안 권력승계를 준비해 왔다는 점, 그가 매우 다양한 엘리트들을 권력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 사회의 특수성(특히 생존력)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남북관계는 과거와 같이 긴장과 대화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양측은 필요에 따라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대화에 임하기도 할 것이지만, 서로간의 진정한 화해 분위기 조성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회담의 성사는 내년이 넘어야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핵문제도 조만간 시원스럽게 해결되기보다는 이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도 현상태를 유지하며, 급격한 진전은 없을 것이다.

中期 전망 (2~5년)

중기적으로 볼 때 김정일 체제는 안정을 유지하며, 점차 개방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과 북한이 처하고 있는 국제 환경을 볼 때, 개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과연 김정일 체제가 이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를 고집할 것인가인데, 김정일 자신의 경제관이 점차 실용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엘리트 중에는 개방성향을 가진 전문관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점진적으로 개방의 폭을 넓혀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방 폭이 증대함에 따라, 남북관계도 점차 호전될 것이다. 미국, 일본, 남한 등의 경제적 원조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과 이산가족 찾기 등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양측은 어느 정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며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長期 전망 (5년 이후)

중기를 넘어서, 점차 개방의 폭이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에 위협이 오게 될 것이다. 초창기의 개방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철저히 통제될 수 있지만, 개방의 폭이 점차 증가할 수록 이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은 감소하게 되고, 개방은 자기 나름대로의 운동력을 가지며 북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일 김정일 체제가 개방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김정일 체제는 내부로부터의 힘에 의해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체제는 보수 강경파 등 반동세력이 중심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급진 개혁파에 의해 주도될 수도 있다.

보수 강경파가 집권할 경우, 북한은 과거의 폐쇄적 사회로 회귀하려고 할 것이며, 결국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고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북측은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내부에서의 반발에 의한 사회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쪽에 의한 흡수 통일이 예상된다.

급진 개혁파가 집권할 경우, 북한은 경제 분야 뿐만 사회 수분야에 걸쳐 개방을 하게 될 것이고, 정치 체제도 전과는 다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경협 등 남북간의 교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경제 통합과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